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확립방안*

Identity Establishment of Korea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through
Promoting of Business Environment

이 경 호(Kyung-Ho Lee)**

김 상 진(Sang-Ji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6.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책 부재 |
| 1. 연구의 목적 | 7.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정책 |
|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III. 한국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확립 방안 |
| II.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상과 과제 | 1. 학문 연구의 정체성과 현장성의 확립 |
| 1. 사서의 전문성과 정체성 부재 | 2. 한국도서관협회의 운영방안 혁신 |
| 2. 한국도서관협회의 운영상 문제점 | 3. 정부기관의 정체성 훼손 저지 |
| 3. 국립중앙도서관과 목록데이터 공유 | 4.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 조성 |
| 4. KERIS의 대학도서관 목록데이터 공유 | IV. 향후 한국 문헌정보학의 방향 |
| 5.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 V.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이다. 정체성 확립의 방안으로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정체성 훼손의 사례가 왜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 조성으로 사서의 전문성과 일자리 창출 등 정체성 확립의 가능성에 대해 진단한다.

주제어: 문헌정보학, 정체성, 사서직, 전문성, MARC, KORMARC, 기업환경, 도서관정책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identity establish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t suggests, as a way of establishing the identity, the necessity of promoting of business environment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s Korean cases that have damaged the identity, and analyzes why such damage has been done and how it affects the fostering of business environment in library and information. It also diagnoses the possibility of identity establishment such as, for example, professionalism of the librarian and creation of jobs through the fostering of business environment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y Word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dentity, profession, MARC, KORMARC, business environment, library policy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khlee@daegu.ac.kr)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접수일 : 2003. 6. 11 • 최초심사일 : 2003. 6. 12 • 최종심사일 : 2003. 6. 15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학문(science)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국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한 지역에서 최초로 출발할 수도 있고, 국가나 국제적 차원에서 거의 동시에 출발할 수도 있다. 지역적 수준이나 국가적 수준에서 수요에 따라 학문의 출발점이 시간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한 학문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면 그 학문은 곧 국제적으로 파생되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와 같이 학문의 태동, 그 원동력은 바로 사회적 수요가 우선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학문을 습득한 후에는 사회에서 이 학문을 습득한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이 학문이 성장,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대학의 특정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없어지면, 그 학과는 존재의미를 거의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 학문의 성장 발전은 사회적 수요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수요는 또한 학문의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수요가 학문 발전의 원동력이라면, 우리는 문헌정보학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헌정보학의 사회적 수요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한 극대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문헌정보학을 건설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에서 사서는 사서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전문화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를 망각한 채, 어쩌면 완전히 노출을 자처한 상태에서 서비스현장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은 우리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 문헌정보학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의 경감은 바로 우리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생활터전인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문헌정보학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우리 문헌정보학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터넷의 환경에서 우리는 향후에 어떻게 우리 문헌정보학이 제 모습을 찾고, 우리 학문의 성장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문헌정보학 기업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망각된 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체성과 추락한 사서의 전문성을 회복하고자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본 연구의 방법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내에서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나 한국도서관협회 및 관련기관 등에서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 관련 정책, 제도 등이 시행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둘째, 상기 조사된 사례에 대한 현황과 이로 인해서 현재 국내에서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및 전문성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향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해본다.

셋째, 분석한 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는 지금 한국 내의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 관련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연구하되, 특히 학회나 협회, 도서관 관련기관의 정책이나 관련업무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II.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상과 과제

1. 사서의 전문성과 정체성 부재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사서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도서관과 관련 기관에 종사하면서 문헌과 정보를 조직하고,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서(司書)라 하며, 우리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은 스스로 사서를 전문직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 전문직이란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¹⁾ 또는, ‘어떤 특정한 부문을 오로지 연구 및 담당하며 특히 그 부문에 정통한 사람’²⁾을 의미한다.

즉,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정한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사서는 지식정보시대에 있어 지식과 정보 부문의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중요

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하권(서울 : 두산동아, 1999), p.5335.

2)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제3판(서울 : 민중서관, 1994), p.3308.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

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로서 사서의 존재가치나 가능성은 계속 확장되고 그 내용도 계속 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문가로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이에 따른 사회적 욕구에 맞추어 자신들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³⁾

그러나 요즘과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주장해왔던 업무의 내용들이 특정 도서관이나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로지 정보제공만을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아무런 제한장치도 없이 인터넷상에서 전문성이 가미된 데이터를 무단 공유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서 MARC 목록정보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다. 전문가인 사서가 필요한 정보로서 사서와 사서가 MARC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사서도 이제는 전문성을 고수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패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서들이 스스로 우리의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고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 사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우리의 일 자리를 창출하고 문헌정보학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사서가 사서의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아갈 때, 사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고, 수요가 많아지며, 문헌정보학 기업이 자생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사회적 힘이 강해짐과 동시에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서의 전문성을 다 내어주면 신규 사서가 전문직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지금 현직에 있는 사서 또한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요즘의 한국 문헌정보학은 정체성이 와해되는 모습이 현저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현직 사서들까지 흔들리고 있다. 사회환경과 정보환경이 변화하면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취업시장이 좁아들면서, 예비 구직자이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학생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이 난 곳도 있다. 4년제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도 이 같은 상황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문헌정보학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우리 학문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문헌정보학의 모호한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 학문의 학문성과 현장성이 열악한데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 학문을 연구해온 사람들의 무책임과 이기심에서 찾을 수 있다. 문헌정보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위상정립에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이유는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용훈,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도서관, 제57권 제1호(2002 봄호), p.20.

지금 이 시각에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가 일부는 인문대학에, 일부는 사회과학대학에, 일부는 심지어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 동일한 내용의 학문이 일부는 전문대학에서, 일부는 4년제 대학에서, 또 일부는 사서교육원이라는 애매 모호한 성격의 기관에서 교육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⁴⁾

문헌정보학과와 학문 외적 요인이 위기 상황까지 내몰린 가장 큰 이유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화려한 직업군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학이나 신문방송학의 경우, 해당 학과를 졸업한다고 모두 법관이나 언론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문헌정보학과에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화려한 직업군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⁵⁾

2. 한국도서관협회의 운영상 문제점

한국 내에서 우리 사서들을 위한 단체로서 한국도서관협회가 있다. 1945년 8월 30일 '조선도서관협회'로 창립될 당시부터 명칭 상으로는 사서협회가 아닌 도서관협회로 되어 있을지언정 그야말로 우리 도서관인 즉, 사서를 위한 단체이면서 사실상 사서들과 호흡을 같이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서관협회가 진정 사서들을 위한 단체라면, 협회가 일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우리 사서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나아가 사서의 전문성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벌이고 있는 일련의 업무를 보면, 과연 이러한 일이 협회에서 해도 되는 일인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다. 협회는 무엇보다도 사서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면서 사서의 전문성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서의 일자리 창출 및 보장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책무와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한국도서관협회가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반도서와 학위논문 등의 도서 목록을 수록한 '한국문헌목록정보(Korean MARC on Disc)' CD-ROM은 대표적인 예로 거론할 수 있다. 국내 최대의 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인 이 CD-ROM은 매년 2회씩 갱신되며 2002년 봄판의 경우 일반도서 491,447건과 학위논문 542,600건 등 모두 103만여 건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일반도서와 학위논문별 검색 및 전체 검색은 물론이고 서명, 저자, 발행자, 주제어, 분류기호,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논리연산자를 이용한 정보검색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전국의 도서관에 거의 무상(실제는 90,000원

4) 이제환, "전환기 한국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圖書館學論集, 제28집(1998 여름호), pp. 325-326.

5) 송정숙, "문헌정보학의 위기인식과 대처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9), p.366.

정도를 받고 있으나, 수록된 데이터의 량이나 제작원가 등을 고려하면 무상이나 다름없음)으로 제공하고 있다. OCLC⁶⁾나 ITS.MARC⁷⁾와 같은 외국의 목록정보는 개개 도서관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국내의 목록정보는 협회 차원에서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내의 문헌정보학 기업환경이 싹틀 수 없음을 협회는 알고 있는가?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 측면에서도 협회가 앞장서서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헌정보학의 터전을 다져야 할 터인데, 협회가 앞장서서 이를 말살하고 있으니 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대학에서의 학교교육만 잘 한다고 이 학문이 성장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발전은 대학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서의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말살하고자 한다면 이는 진정 사서를 위한 전문단체라 할 수 없다. 아마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정보를 CD-ROM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가 생각된다.

첫째, 협회의 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을 얻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이거나,
둘째, 전국의 많은 도서관에서 목록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거나,
셋째,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협회의 이러한 CD-ROM 판매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야기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자.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하는데, 도서관에서 CD-ROM 자료를 통해 목록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사서들이 보다 신속하게 목록을 할 수 있어 이용한다고 말하는 데 있다. 과연 목록이 신속할까? 아마 이것은 국내에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스템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목록작업에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신속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상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 상용의 목록정보 제공시스템이 없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으나, 이렇게 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 목록정보를 무단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상용시스템이 생겨날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운영하는 전문기업이 생겨나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이러한 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

6) OCLC Homepage <<http://www.oclc.org/>>[cited 2003. 5. 1]

7) ITSMARC Homepage <<http://www.itsmarc.com/>>[cited 2003. 5. 1]

보처리, 정보제공 전문기업이 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협회와 사서 등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한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CD-ROM이 상용시스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도서관협회에서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시스템에 우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일반 공공도서관이나 소규모의 전문도서관에서는 구입자료를 목록 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이나 인력 없이도 목록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기관장에게 심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기관장에 따라서는 목록업무는 아무나 다운 받아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거나, 하루에 업무량 이상의 목록을 강요하거나, 목록업무를 하는 사서를 비전문직자로 간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도 목록을 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사서 개개인에게는 결코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몇몇 기관장은 CD-ROM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사서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및 장기적인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자각하여야 한다.

사서의 입장에서 보자. 사서의 입장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의 CD-ROM을 사용하지 않으면, 직접 목록을 작성하던지 다른 도서관과 협력에 의해 정보를 공유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상용시스템을 사용하여 목록을 할 수 있다. 비용 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CD-ROM이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선호할 수도 있으나, 실제 데이터의 업데이트 상태를 고려하면 그다지 매력적인 것도 아니다. 아마 사서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상용시스템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다소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상용시스템을 선호할 것이다. 다만 도서관의 예산이 상용시스템을 사용하기에 부담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옹호할 수도 있겠으나, 목록을 함에 있어서 사서의 전문성과 도서관의 발전,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업환경의 조성 등을 고려한다면, 사서 모두는 마땅히 도서관이 다소의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상용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사서의 정체성, 사서가 운영하는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사서는 사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서 스스로 비하하고, 업신여김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목록 데이터베이스인 '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첫째,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록 전문사서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 둘째, 사서의 전문성이 박탈된다.
- 셋째, 사서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 넷째, 대학에서의 학문연구 및 발전에 나쁜 영향을 준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

다섯째, 대부분의 경영자는 목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로 간주한다.

여섯째, 최초 목록을 하는 사서는 진정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사서조차도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일곱째,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을 말살한다.

3. 국립중앙도서관과 목록데이터 공유

1) 목록데이터의 무단 다운로드

문헌정보학에서 분류와 목록은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도 학문의 전문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이 전문영역의 교과목을 다수 이수한 후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이 받는 자격증이 사서 자격증이다. 그리고 도서관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인 사서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사서가 만든 목록데이터가 작성과 동시에 인터넷상에서 아무렇게나 떠돌아다닌다면, 목록을 하는 사서직은 전문직이 될 수 없고, 사서는 전문가가 더더욱 아닌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최초로 목록을 하는 전문 사서조차도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사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1년 6월부터 온라인으로 국가자료종합목록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을 개발해 운영했으나, 2003년 4월 1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MARC 다운로드 기능을 중지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대안으로 공공도서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정자료실에서는 'KOLAS II' 및 'KOLIS-NET 독립형'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고,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⁸⁾를 이용하도록 했다. MARC 다운로드 중지의 이유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및 행정자료실의 참여가 저조하여 신간자료에 대한 표준목록의 공유가 어려운 실정을 들었다.⁹⁾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이자, 도서관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이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는 KOLIS-NET에 모아지게 되며,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다시 전국 공공도서관들이 공유하게 한다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의 수서, 등록, 정리업무에서 KOLIS-NET을 통한 관련 서지 MARC 활용이 가능하며, KOLIS-NET과 공공도서관의 목록정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특징이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http://www.riss4u.net>>[인용 2003. 4. 25]

9)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의 '공지사항' <<http://www.nl.go.kr/kolisnet/>>[인용 2003. 4. 30]

있다. 주요기능 중 목록관리 부문은 공공도서관이 KOLIS-NET의 자료를 검색하여 수서, 등록, 정리 등에서 목록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며, KOLIS-NET 자료를 해당 도서관의 자료로 단시간 내에 다운로드하여 서지 및 소장 MARC를 단시간 내에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KOLIS-NET에서 변경된 서지자료를 공공도서관 자료로 손쉽게 업데이트 작업을 할 수 있게 구축했다.

KOLIS-NET은 당초 이처럼 공공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운로드 중지 이전까지 모든 도서관 또는 자료실에서 서지 MARC를 다운로드 받아왔다. 다운로드 중지 이후 KOLIS-NET의 자유게시판에 MARC 다운로드 중지를 항의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기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데이터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해온 것이다.

국내 언론에서 ‘소리바다’의 음악파일 무단 다운로드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음반계나 가수들은 무단 다운로드를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네티즌은 음악파일을 다운받는 것은 당연하고 ‘소리바다’는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경우를 한 번 살펴보자. 음악은 작곡가와 작사가, 가수가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독창적 산물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의 판매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에서 음악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네티즌들이 사용한다면, 가수는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네티즌들의 주장은 여론에 앞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네티즌들의 주장은 자기 중심적 독단의 산물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서들이 노력한 산물인 목록데이터(MARC)는 우리의 전문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 건의 자료를 목록하는 것도 자료에 따라서는 목록전문가가 수십 분을 소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목록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전문가가 한 건의 자료를 목록하기 위해 20~30분을 투자하여 만든 MARC 데이터가 목록됨과 동시에 인터넷에 올려지고, 다른 도서관의 어떤 사람이라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목록을 담당하는 사서는 전문가로 인정받기 힘들다. 목록 데이터를 다운받아 목록을 하는 사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료를 최초로 목록하는 사서조차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목록사서의 전문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 목록사서의 수적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사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고 무조건 데이터의 다운을 불허하고 독자적으로 목록을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목록을 하되 우리의 전문성을 살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록데이터의 공유는 도서관간 협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상용서비스기관 즉, 기업을 통해서 제공받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목록데이터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무료로 다운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누구를 위한 다운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주장인가? 아니면 사서들의 주장인가? 이용자들의 주장인가?

도서관의 주장이라면, 사서가 전문성이 박탈되건 말건, 일자리가 줄어들건 말건 상관없이 거의 공짜로 목록데이터를 다운받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 도서관은 사서가 일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이러한 발상을 한다면 큰 잘못이 아닌가? 사서의 주장이라면, 전문성과 후배의 일자리와는 관계없이 나만 편하면 된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서가 있다면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학회나 협회, 나아가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실정을 살펴보면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목록데이터는 어느 누군가 목록전문 사서가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작성하지만, 전국의 동료 사서를 위해서 목록을 다운받게 할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사서가 사서를 위해 무료로 다운받게 하는 일이 우리 후배 사서들의 일자리를 말살하고, 우리 스스로 전문성을 팽개치고, 우리 문헌정보학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서의 전문성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본들 우리 스스로가 전문성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는데, 어느 분야에서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겠는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아닌가?

혹자는 목록데이터도 정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생각은 다르다. 목록데이터는 사서의 전문성이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정보가 아니다. 목록데이터는 목록업무를 수행하는 사서만이 필요한 데이터인데, 이것이 어찌하여 무료로 유통되는 정보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사서만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인 만큼, 인터넷상의 무단 배포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사서가 사서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전문성을 추락시키고,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들 일자리를 말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은 우리의 전문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리의 후배들이 전문가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목록데이터베이스의 지적소유권 인정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2) 출판시 도서목록서비스를 통한 목록데이터 제공

국립중앙도서관은 2002년 7월 2일부터 '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이라는 기존 용어 대신 '출판시도서목록'이라는 새 용어로 CIP(Cataloging In Publication)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판시도서목록서비스'로 불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e-CIP(Electronic Cataloging In Publication Service) 제도'가 그것이다. CIP란 출판사에서 신간도서 출판 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성해 준 표준목록을 제공받아 도서의 표제지 뒷면 등 일정한 위치에 인쇄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면 전국의 도서관은 분류 및 목록작업을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표준화된 목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명이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료수집 및 정리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전문인력과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사실이며, 수서 및 정리업무의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왔으나, 개별 도서관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지금도 수서목록은 물론이고 같은 책에 대한 분류와 목록도 도서관마다 따로 작성되어 담당 사서의 경륜과 관점에 따라 서지사항이 다소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 담당 사서가 잘 알고 있으며 CIP 표준 데이터가 제공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부여된 CIP 데이터는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다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자료정리의 표준형식인 KORMARC 포맷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출판유통진흥원에서 출판유통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판유통정보시스템'에서도 CIP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교보문고의 도서관매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CIP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협의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CIP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CIP를 처음 신청하는 출판사에서는 CIP '참여신청' 화면을 통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화면의 정해진 양식에 의해 출판사정보를 입력한다.

② 참여신청을 한 출판사는 'CIP 신청' 화면을 통하여 CIP를 부여받을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목록 데이터(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예정일 등)와 지정된 파일(표지, 표제지, 판권지, 목차, 서문, 요약 등)을 첨부하여 CIP 센터에 CIP 데이터를 신청한다. CIP 신청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통보서'도 입력하여 한국문헌번호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③ CIP 센터에서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목록데이터와 첨부파일을 확인한 다음 접수처리하거나,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출판사로 보완요청을 한다.

④ 접수 처리된 CIP 신청 데이터에 대해 CIP를 작성하여 해당 출판사로 전송한다.

⑤ CIP 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출판사는 'CIP 변경요청' 화면에서 변경내용을 CIP 센터에 통보한다.

⑥ 출판사는 해당도서 출판 시 제공된 CIP 데이터를 표제지 이면 등 일정한 위치에 인쇄한다.

⑦ 완성된 CIP 데이터는 출판계에서 전자상거래 등 출판유통 현대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며, 'e-CIP 홈페이지'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으로 전송되어 전국도서관, 출판사, 서점, 국민에게

서비스된다.¹⁰⁾

국립중앙도서관이 내세우는 CIP의 기대효과는, 도서관 입장에서 표준목록데이터의 활용으로 편목업무를 경감시켜 자료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하고, 개별 도서관의 목록의 질이 개선되며, 출판예정도서의 표준목록을 이용해 자료의 신속한 주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료의 입수와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출판사와 서점 입장에서는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출판물의 사전홍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출판물의 유통을 촉진하고, CIP 데이터 활용을 통해 도서관 정리업무에서 절감된 비용이 더 많은 자료구입으로 이어져 출판물의 판매가 증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점의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서 CIP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출판유통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도서관 정리업무에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신간도서への 접근이 가능해지고, 목록의 질이 개선되므로 개별 도서관 이용자의 경우 목록과 자료에 더욱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며, 신뢰성 있는 목록정보의 신속한 제공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들이는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e-CIP 제도가 시범 서비스 단계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홍보 부족과 출판사의 인식 부족으로 극히 일부 신간도서의 데이터만이 e-CIP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어 수서 및 정리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CIP 시범서비스 11개월이 지난 2003년 5월말 현재 CIP 참여신청 출판사 수는 435개이며, CIP 부여 건수는 783건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¹¹⁾

CIP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전통적인 자료 정리업무는 그 영역이 축소되어 인원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관의 전산화로 업무변화를 경험해본 사서라면 CIP제도 도입으로 겪게 될 또 한 차례의 업무 변화에 심적 부담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CIP제도가 사서의 역할을 축소시켜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의 본질적인 업무인 분류 및 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일 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우리 사서들이 동료 사서의 목을 죄는 제도의 시행에 고민을 해보아야만 한다.

개별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가 다양하고, 같은 분류표라도 판차가 다른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위험한 발상에 그칠 수 있다. MARC도 마찬가지로 개별 도서관마다 필드 사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성하는 CIP가 일률적으로 분류와 목록의 전문가인 사서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개별 도서관에 안착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CIP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도서

10) 국립중앙도서관 e-CIP 사이트의 '시스템 소개' <<http://211.185.62.19/ecip/FAQ/>>[인용 2003. 4. 25]

11) 국립중앙도서관 e-CIP 사이트의 '게시판' <<http://211.185.62.19/ecip/board/>>[인용 2003. 5. 1]

관 행정가들의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CIP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 서도 사서의 전문성을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4. KERIS의 대학도서관 목록데이터 공유

KERIS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를 통해 국내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종합 목록시스템(UNICAT)’을 구축하고 개별 도서관으로 하여금 목록데이터를 무상으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목록 시스템에는 2003년 2월말 현재 376개 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600만건의 서지데이터와 2,600만건의 소장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¹²⁾ KERIS는 1997년 7월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동목록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뒤, 다음해 5월 초기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UNICAT 1.0 개발을 완료하는 동시에 OCLC 온라인 검색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UNICAT 5.0을 개발하여 회원 도서관에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KERIS의 구상은 국내의 어려운 도서관환경을 위해 개별 도서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에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ERIS의 이러한 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KERIS는 미국의 OCLC를 모방하여 이를 국내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OCLC와 KERIS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OCLC는 처음에 도서관 협력시스템으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전 세계를 상대로 기업활동을 하는 상용 시스템이다. 비록 지금도 비영리(non-profit) 기관이라고 하나 운영상에서는 직원이 2,900여명을 고용하면서 목록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수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영리기관이다. 우리 한국의 비영리기관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헌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전 세계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목록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여 운영하는 문헌정보학분야의 세계적 기업이다. 이 기관의 한 직원의 말을 옮겨 보면, “우리는 직원 2,900여명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목록데이터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 건의 목록 레코드를 다운받는데 자그마치 3,800원 정도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이 3,800원이란 것이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에서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후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직원도 인도 INSDOC(Indian National Scientific Documentation Center)의 직원에게 이 금액을 제시하였더니 인도의 입장에서는 1/12로 금액을 조정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간의 경제력에 따라 달러의 가치

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의 ‘종합목록서비스’ 공지사항 <http://www.riss4u.net/librarian_ch/list/service/> [인용 2003. 5. 1]

다른 결과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MARC 레코드 1건당 3,800원에 다운받는 것은 엄청 비싼 것임에 틀림없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처럼 문헌정보학 기반의 전문기업에서 목록데이터를 가공해서 전세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전문성 확립은 물론,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인력의 고용창출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KERIS의 경우는 국가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많은 부분에 대해 OCLC를 모델로 삼고 있다. 이같은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KERIS가 OCLC를 흉내내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발상이다.

KERIS는 국가 차원의 힘을 빌려 대학이나 도서관 평가와 결부시키면서 국내의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회원에 가입하게 하고, 목록데이터를 반입하게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어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정보를 무료로 전국의 도서관에 배포하고 있어 문헌정보학의 전문성은 물론,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내에서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이 싹들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5.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전산화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 개발과 관련하여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후원 아래에서 KERIS에 의뢰하여 학교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공모하였고, 그 결과 (주)아이네크가 낙찰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학교도서관의 운영상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묘안을 짜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음을 부산시교육청은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누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개발된 학교도서관 전산화 통합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영역과 더불어 문헌정보학의 전공과 관련한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 운영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구나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이다. 운영하고자 한다면 관련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기업의 성격을 가지되, 수익성 없이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나 유지보수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이 할 일을 부산시교육청에서 하고자 한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만약 시스템 개발회사에 유지보수를 맡긴다면, 부산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은 이 회사가 독점하는 결과가 되고 일종의 특허시비가 일게 된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부산시교육청 산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경쟁상대가 없게 된다. 독점체제가 되면 서비스나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소비자인 일반 학생과 학교도서관만이 피해자로 전락하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의 실정에서 보면, 입찰에 의해 형성된 거래는 물건이나 제품이 납품됨과 동시에 거의 종료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에서조차도 개발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스템 개발 후에 개발팀이 해체되고 없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사실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납품하고, 유지보수 또는 관리하는 것은 기업이 할 일이다. 기업이 할 일을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하니,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걱정이 앞선다. 물론 프로그램을 개별 학교에 염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메리트(merit)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산하의 많은 학교들을 담보로 잡아두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결국 개별 학교도서관에게 고통만 안겨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 원리로 두는 것이다. 물론 초기에는 다소 비용이 수반될지언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거쳐 개별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최상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왜 고민거리를 떠 안고 가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둘째, 시스템의 업데이트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방식대로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프로그램에 능통한 공무원을 상시 배치해야만 업데이트가 유지돼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 공무원의 배치는 불가능한 현실이기에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기리라는 예측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입장에서도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업데이트를 위해 직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시스템 업데이트가 용이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지 않아 학교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은 하루가 다를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는 폐물에 머물고 말 것이다.

셋째, 문헌정보학 기업환경이 말살되고, 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

어렵사리 우리 문헌정보학계가 기업화의 초기단계에 들어선 시점에서 도서관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앞으로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은 조성

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도서관 관련 시스템의 전문가인 사서들의 시각이 도서관 현장의 전산화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서관 나름의 특성을 담은 유기적인 시스템 개발과 현장에의 적용이 불가능해져 이용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요자인 개개 학교도서관의 경우 엄청난 불편이 수반된다.

시스템 유지보수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현실인데다, 업데이트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개개 학교도서관만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 자명해진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할 것이고, 이는 근본적으로 학교도서관 전산화 자체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전산화의 효용성에 적신호가 발생하게 된다.

6.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책 부재

도서관정책은 국가의 도서관 제도와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서관행정에 있어서 그 준거가 되고 원리가 된다.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 보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 특히 문화정책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정책분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¹³⁾

즉, 도서관정책은 도서관이 경제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인 활력소로서 없어서는 되지 않는 필수적 장치가 되도록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는 7가지 하위단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①제도의 확립 ②자료의 강화 ③정보의 표준화 ④인적 자원의 확보 ⑤도서관 협력망의 결성 ⑥봉사기능의 강화 ⑦서지의 자동화 등이 그것이다.¹⁴⁾

도서관정책은 도서관이 국가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문화를 누리며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성을 함양하도록 돕고, 나아가 문화유산의 원천으로 기초학문을 개발하고 각 전문분야를 세분하여 새로운 이념과 철학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도서관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담당 부서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도서관박물관과에서는 만족스런 도서관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도서관정책은 1990년 문화부 발족 이전에는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전담해왔으나, 1991년 ‘도서관진

13) 이용훈,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서관, 제55권 제4호(2000 겨울호), p.10.

14) 정진해, “한국정부의 도서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997), pp.19-22.

홍법'의 제정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화부로 이관되고 문화부내 어문출판국에 도서관 정책과가 신설되면서 문화정책의 일부로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1994년 5월 직제 개정으로 어문출판국이 폐지되면서 도서관정책과는 생활문화국으로 이관되었고, 같은 해 12월 생활문화국이 문화정책국과 통합됨에 따라 문화정책국에 현재의 도서관박물관과로 정착된 것이다.¹⁵⁾

이처럼 도서관정책을 전담하는 행정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만큼, 강력한 행정력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현 단계의 행정담당 부서를 보다 강화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전처럼 도서관정책만 전담할 수 있는 직제 개편이 요구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모든 관중, 즉 법령에 명시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수립과 적절한 집행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 개별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모든 도서관을 정책대상으로 삼아 폭넓고 강력한 도서관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서관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¹⁶⁾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2001년 12월말 현재 437개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191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20개, 사립공공도서관이 26개이다. 구성비율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43.9%,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50.6%로서, 1993년도의 전체 공공도서관 281개관 중 지방자치단체 운영 도서관 18.9%, 교육청 운영 도서관 75.8%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서관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높아졌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친화형 문화공간인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제고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현행 공공도서관의 운영체계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공공도서관의 구성비율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로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기도 하다.¹⁷⁾

최근 도서관계는 정보 자체보다도 정보전달 수단인 디지털도서관 구축이나 멀티미디어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등이 우리 생활을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전달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도서관정책 자체가 이같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에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2000년 3월 발표된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이 좋은 예이다. 이 계획은 2000년 2월 1일

15) 김종율, "도서관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도서관, 제57권 제1호(2002 봄호), p.4.

16) 이용훈, 전계논문, p.16.

17) 김종율, 전계논문, p.4-5.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도서관이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도서관 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가 함께 마련한 역대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책이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우선 2002년까지 국비 1,670억원과 지방비 1,398억원 등 모두 3,068억원을 들여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의 핵심적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그 이후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381개 공공도서관과 215개 학교도서관 및 160개 문고에 디지털도서관을 설치해 도서관을 디지털 환경으로 탈바꿈시킨다.¹⁸⁾

그러나 이 계획은 도서관에 대한 기본이해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고 행정 편의적이었으며, 외형적 성과를 우선한 것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서관 정보화라는 미명 아래 도서관에 컴퓨터 몇 대 지원하는 것은 그 동안 독서실로 치부되었던 도서관을 PC방으로 만들뿐이라는 지적에 정책담당 부서는 도서관 정보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끊임 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¹⁹⁾

정보를 담은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도서관정책의 근본적인 접근방식이라 하겠다.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직이 관장을 맡도록 하고, 규모에 따라 전문직자인 사서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서직이 관장에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사들을 대거 모집한 것과 비교해볼 때 지식기반사회의 핵심기반시설인 도서관을 운영할 전문인력 확보에 소극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한 부분인 도서관정책은 아직까지 정책의 대부분을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운영의 일부분에 대한 제한적 지원, 몇 가지 이벤트적인 사업추진 등에 머무르고 있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이나 집행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²⁰⁾

7.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정책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은 1970년대까지는 학교도서관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학교에 따라서는 도서관이 독립건물로서 제법 규모가 큰 도서관을 가진 곳도 있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교교육이 대학의 입시교육 위주로 나아가면서 서서히 학교도서관으로서의 입지와 위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도서관 예산 또

18) 김태식, “2002년까지 도서관 정보화에 3천억원 투입,” 연합뉴스, 2000년 3월 14일자.

19) 이용훈, 전개논문, pp.25-27.

20) 상계논문, p.27.

한 이와 운명을 같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 민간 차원의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교도서관을 살려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살아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입시교육이 위주가 된 현행 교육체제에서는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으나,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정상화시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성세대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학습하고 있고, 도서관이 학습의 중심축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교육부에서도 2001년부터 각 지역 교육청 단위로 수적으로는 적지만, 전자도서관 구축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별로 4,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02년 7월 26일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정상화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본다. 문제는 교육부에서 어떤 방법과 단계로 학교도서관을 정상화할 것인지 명확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문헌정보학계는 우리의 권리와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일련의 일들을 보면, 마치 우리 교육부가 아니면 학교도서관을 회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국의 학교도서관과 교육청, 심지어 공공도서관까지 끌어들여 설명회, 정상화 방안 운운하며 모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도서관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제 자신이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학교도서관 솔루션을 개발하고, 납품하고, 자문에 응하고, 서비스해 본 결과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연간 1,000만원 정도(물론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날수도 있음)의 도서구입비 확보, 도서관 전산화, 공간 및 시설 확보, 전담사서 배치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어 주면 학교도서관은 잘 운영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예산 즉, 돈이다. 문제는 여기 있는데 무슨 대책이니, 활성화 방안이니, 문제점이 무엇이니 하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선두역할을 하고 있는 양 과시하는 모습이 우습기 짝이 없다. 이제 이러한 모임은 필요 없다. 이유인즉,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나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 있었지만, 우리 사서들의 입장을 고려한 해결 방안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향후 학교도서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활성화되고 정상화된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으면 어떠한가? 우리의 자원도 풍족하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한계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정상화시킨다면, 국가는 국가대로 어렵고, 우리도 사서의 권익과 전문성을 보호받기 어렵게 될 뿐이다. 해결책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의 전

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²¹⁾를 위해 봉사하여 왔고, 또한 많은 공헌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권익과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학계나 개개 사서 모두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적은 급료에, 비정규직으로 올바른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모든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우리 사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추락시키는 첫 번째 요인이다. 우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무한대로 추락시켜 놓고 우리의 일자리와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전문성 확보와 정당한 일자리 확보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초기에 학부모나 비전문가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한들 우리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는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제는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 스스로 전문성과 정체성을 키워나가는 일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Ⅲ.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확립 방안

1. 학문 연구의 정체성과 현장성 확립

우리 문헌정보학은 현실성과 현장성이 강한 학문이다. 현장성이 없이 문헌정보학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 국내의 문헌정보학과와 관련학회 차원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체성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본질'을 의미한다.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이란 역시 우리 사회의 문헌정보 환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문헌정보학이 추구해야 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그 무엇을 의미한다.²²⁾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정보'와 '컴퓨터'만 앞세우는 바람에 필요 이상으로 다양성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는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돌아왔다. 문헌정보학이나 문헌정보학과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며,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지에 대하여 손에 잡히게 확실히 설명

21)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 사서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주고 있음은 이미 경기도지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도메리"를 통해 토론했던 적이 있음

22) 도태현, "한국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당면과제에 대한 대안 제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2000, 9), p.68.

하여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이는 문헌정보학의 파상적, 산발적 영역 확대가 가져온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 외화내빈이랄까? 이렇게 하여 우리가 손에 넣은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는데 비하여 문헌정보학의 전통적 영역은 경시되거나 무시되었으며 그 틈에 타 분야에서 손을 뻗치고 있음이 감지된다. 독서교육은 국어국문과에서, 목록이나 색인은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또한 교육매체는 교육공학에서, 문서나 기록물 관리는 행정학이나 역사학에서...²³⁾ 우리 문헌정보학의 명확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타학문에서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연구자의 연구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타학문에서 연구하여야 할 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우리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학문적인 정체성의 상실에 이어 현장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연구에서의 정체성 상실은 도서관 현장에서의 외면은 물론 우리 문헌정보학의 붕괴를 가져오는 시발점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전공과목들을 통합 학계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교과목의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의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성된 교과목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문헌정보학입문(연세대)/문헌정보학원론(이화여대)/정보학개론 & 서지학개론(성균관대) ②정보조직론 : 분류 & 정보조직론 : 목록(연세대)/분류론 & 목록론(이화여대)/자료조직법 I & II(성균관대) ③장서구성론(연세대)/정보자원관리(이화여대)/자료선택론(성균관대) ④도서관·정보센터경영원론(연세대)/도서관·정보센터경영(이화여대)/도서관경영론(성균관대) ⑤과학기술정보(연세대)/과학기술정보원(이화여대)/자연과학서지(성균관대) ⑥색인 및 시소러스(연세대)/색인·초록법(이화여대)/색인 및 초록법(성균관대) ⑦정보조사계공론(연세대)/정보봉사론(이화여대)/참고봉사론(성균관대) 등이다. 동일한 교과목을 지금처럼 학교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표준화'를 중요한 연구 테마로 삼고 있는 문헌정보학계가 선도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²⁴⁾

다음으로는 현장에서의 정체성 확립이다. 연구와 현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연구 없는 현장은 있을 수 없고, 현장이 없는 학문 또한 있을 수 없다. 특히 우리 문헌정보학은 현장성이 강한 학문인 만큼, 현장에서의 정체성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문의 장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하고 실습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학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 가운데 분류나 목록, 정보봉사, 장서개발과 같은 과목은 핵심교과목이다.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서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학문의 미

23) 상계논문, p.56.

24) 이제환, 전계논문, p.348.

래는 없다. 우리 학문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발굴한 뒤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여 공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란 말이다.

문헌정보학은 우리 사회에 기반한 토착적인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의 연구결과를 주변의 다른 학문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학문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기초가 마련되고, 장차에는 한국 문헌정보학이 우리 사회의 심장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되리라고 믿는다.²⁵⁾

탈기관화의 논리는 자칫 허약한 우리의 현장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다. 문헌정보학은 도서관 현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관계에 있다. 즉, 우리 학문은 그 현장을 튼튼히 세워나가야 하는 학문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영역인 분류, 목록, 도서관경영, 장서개발과 함께 도서관적 정신과 기술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현대화, 첨단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문의 실체를 튼튼히 하면서 동시에 외연을 확대해 타학문과 경쟁해나가는 것이 우리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로 보인다.²⁶⁾

2. 한국도서관협회의 운영방안 혁신

한국도서관협회는 2003년 4월 현재 단체회원 1,163개소(국립도서관 1개소, 공공도서관 359개소, 대학도서관 336개소, 학교도서관 187개소, 전문/특수도서관 280개소)와 개인회원 2,048명(보통회원 1,563명, 평생회원 485명)을 확보한 우리나라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관련 기관과 인적자원을 망라한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립 58년이 된 한국도서관협회는 명실상부하게 위상을 제고할 때가 된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주요사업’ 중 첫 번째가 바로 ‘도서관 발전 및 사서직 권의 신장을 위한 활동’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는 ‘대 정부 교섭 및 협력, 도서관계 의견 조정, 관련 분야 및 대 국민 홍보’라고 적고 있다. 이처럼 주요사업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업무가 도서관인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문헌정보학을 공부한 사서들이 나아갈 길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사서의 활동 범주를 기관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도서관의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활동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시기가 됐다.

지식기반사회인 정보화시대를 맞아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인 사서가 왜 도서관에만 발을 묶어두고 있어야 하는가? 혹시나 도서관인 스스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사서들이 사회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

25) 상계논문, p.343.

26) 양재한, “우리 문헌정보학의 실천성 확보를 위한 반성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2000, 12), p.102.

반이 되어주는 것이 협회의 임무이다. 도서관인이 기업활동도 하고, 정치활동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기금이라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사서가 도서관을 벗어난다고 해서 도서관을 떠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만,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를 제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서가 기업활동으로 많은 재력을 얻고, 사서가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를 운영해야 도서관인의 시각과 인식에서 산재한 도서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고서는 첨예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후배 사서들에게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는 것이다.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서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야 한다. 요즘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불안정한 증권시장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에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투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의 조직인 대한공인중개협회가 국세청의 단속에 대항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동산투기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다. 현행 공인중개사제도는 부동산 거래를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학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학력이나 주제 배경과 관계없이 자격시험에서 평균 60% 이상의 점수만 획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우리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들보다 훨씬 교육적인 배경이 뒤떨어지는 공인중개사들이 힘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야 한다.

도서관인의 새로운 활로인 기업환경을 모색하는데 사서들의 권익을 신장한다고 표명한 한국도서관협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서들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부에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협회 조직 내에 기업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문헌정보학 관련 기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3. 정부기관의 정체성 훼손 저지

우리 문헌정보학이 정체성을 확립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사회에서 우리 문헌정보학 졸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국은 목록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도 운영하고 사서의 일자리도 창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국립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인 목록데이터를 무단 방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는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헌정보학의 장래를 모색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말살하는 목록데이터 무단 다운로드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사서가 사서의 일자리를 빼앗고, 앞길마저 막아서

는 일에 대해서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개별 도서관의 특성을 인정해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확실히 목록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도서관 행정가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서관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부서의 직제 개선도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도서관 정책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나, 도서관 행정담당 부서는 다원적이다.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아래에 있고,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일부는 교육청 관할에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일부는 문화관광부, 전문도서관의 일부는 중앙행정기관, 새마을이동문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다.²⁷⁾

이처럼 다원화된 관리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한편, 현재 도서관 정책을 주관하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도서관박물관과에 강력한 행정력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局) 수준의 전담부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것이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의 요구이다.

4.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 조성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 조성은 목록데이터의 무단 방류나 복제를 방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목록데이터의 무단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서의 정체성과 전문성 확립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분야에서 문헌정보학 전문기업이 생겨나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바로 사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특히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홍보하는데도 엄청난 효과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서직은 대부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나, 앞으로는 사기업 부문으로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가 기업을 운영할 수 환경도 만들어 주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선임자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처럼 기업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은 아마 학회나 협회 차원에서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학회나 협회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리라고 본다.

최근 직업군이 영세한데다, 졸업 이후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서 문헌정보학과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학부제를 기피할 정도로 관심을 끌지 못해 폐과가 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서관인들은 문헌정보학을 위기에서 건지기 위한 방안으로, 사서들이 문헌정보학 관련 시장에 뛰어 들 수 있는 기업환경을 도모해야 한다.

27) 이만수, “정보사회에서의 국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1호 (2001, 3), p.213.

IV. 향후 한국 문헌정보학의 방향

시대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역할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사서도 오랜 역사를 통해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해왔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사서는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성 부재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주체의식이 부재하여, 사서직의 안정성에 숨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²⁸⁾

특히 요즘은 신자유주의가 지식과 정보의 확보와 활용이 개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 사회를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사서들은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지식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가치로 삼아온 사서들은 지식과 정보의 불균등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사회적 힘을 발휘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서는 이용자를 자신의 파트너이자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전재자(generator)가 되어야 한다.²⁹⁾ 구체적으로는 정보원과 이용자 사이의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정보중개자(mediator), 정보의 해석자(interpreter), 자료의 이용방법을 지도하는 정보교육자(educator), 이들을 종합 분석 및 가공하는 지식 엔지니어(knowledge engineer)가 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제반 기술과 행정, 재정적 과제도 복잡다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서들의 전문성도 더욱 세분되어야 하며 전문성의 수준도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사서는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중심무대로 삼아 활동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도서관의 역할도 변모하고 있으며 유사한 기관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서에게 활동무대의 확장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되는 한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한다. 문헌정보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영역 확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비영리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전공한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 이윤 창출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정부-공공부문-민간부문 사이의 상호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이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서들도 도서관 서비스를 산업화하는 것에도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³⁰⁾

28) 이제환, “추락하는 ‘대학의 심장’, 흔들리는 ‘사서의 정체성,’” 圖書館學論集, 제28집(1998), p.508.

29) 남태우, “司書之大道 君子不器,” 도서관문화, 제36권, 제4호(1995, 7/8), p.2.

30) 이용훈, 전개논문, p.31.

다양한 노력으로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충실한 기본실력과 함께 지식정보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서들이 즉각 뒤를 받쳐줄 수 있어야 한다.³¹⁾ 문헌정보학의 커리큘럼도 이처럼 산업화로 확대되는 영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칠 정도로 다각도로 영역을 확대하느라 다른 학문에 문헌정보학의 영역을 내주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문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영역을 기업활동에 적용시키는 것이 사서의 영역을 넓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경영학을 전공한 사업가가 문헌정보학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가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전문성과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문헌정보학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선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진출한 문헌정보학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관련기관은 사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을 방지해 주면 자연스럽게 환경은 조성될 수 있다.

전 이화여대 도서관장을 역임한 이봉순 교수는 후학들에게 사서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누구나 도서관인으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려면 커미트먼트(commitment)가 있어야 해요.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혼신을 바쳐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모든 사서들이 열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전문직으로서의 긍지, 또 어떤 일에 대한 사명감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³²⁾ 이 교수의 말은 현재의 사서와 미래의 사서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말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관련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영역별로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도서관협회는 사서들의 권익 신장을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내세우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목록데이터인 ‘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서의 전문성과 일자리를 훼손하고 있다. 의료 소비자들한테서 외면

31) 상계논문, p.36.

32) 이수상, “한국의 문헌정보학 건재한가? : 이봉순 관장과의 대담,” 도서관문화, 제36권, 제1호(1995, 1/2), p.19.

은 당했지만 의약분업을 두고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면대결을 벌인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둘째, KERIS는 어떤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어서 전국대학도서관장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면 전국의 모든 대학도서관장이 KERIS의 지시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 또한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스스로 권익을 빼앗기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정보전문가인 사서들의 고유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목록데이터를 공유라는 명분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과 '출판시도서목록서비스', KERIS가 운영하는 한국연구정보서비스의 '종합목록시스템' 등이다. 이들 기관을 통해 목록데이터는 가치에 비해 거의 무상으로, 또는 완전히 무상으로 다운로드됨으로써 사서의 전문성이 침해되고 있다.

넷째, 이처럼 공유라는 미명 아래 목록데이터가 무단으로 다운로드되는 것에 대해 사서들은 단순히 편리하다는 생각만 가질 뿐, 이같은 현실이 장래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눈앞의 편리를 쫓기 위해 벌어지는 목록데이터 공유가 현직 사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후배 사서의 일자리가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서가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식정보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지만, 분류와 목록 등 문헌정보학의 고유 영역을 지켜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사서로서의 이미지를 지켜내고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섯째, 지망하는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학과의 존폐가 현안으로 대두될 정도 위기를 맞은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방만하게 영역을 확대하려다가 우리의 영역을 다른 학문에 내어주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문헌정보학 고유의 영역을 다방면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문헌정보학과와 소속 교수들이 제시해줘야 한다.

일곱째,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도서관박물관과를 도서관정책만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으로 격상해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재 종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관리체제를 일원화하여야 된다.

여덟째, 문헌정보학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목록데이터의 무단 다운로드를 중지해야 한다. 목록데이터의 가치를 높여 외국의 사례처럼 상용화를 시도하고, 사서의 진로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으로 확장시키면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의 일자리도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